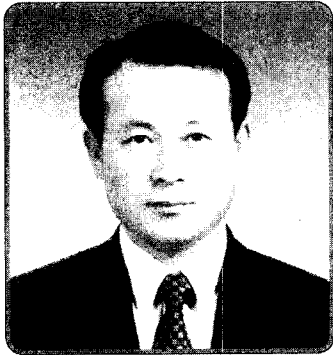


한강유역관리시스템의 도입과 추진현황



전 병 성

現 한강유역환경청장(2002. 11.)
 건국대학교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도시계획학석사)
 미국 일리노이대 대학원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졸업(경제학석사)
 제21회 행정고시합격(1977)
 건설부, 경제기획원 근무
 환경부 법무담당관, 평가제도과장, 대기정책과장, 정책총괄과장, 총무과장
 주OECD대표부 참사관(환경담당)
 환경부 공보관, 자연보전국장, 국제협력관

1. 유역관리의 개념

1. 유역관리의 정의

유역(또는 집수구역)이란 수문학적 정의에 의하면 빗물이 자연적으로 하천, 호소, 하구, 해양 등의 특정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지표수와 지하수를 모두 포함한다) 주변의 능선을 연결하는 선으로 둘러싸인 지면을 일컫는다. 유역관리(Watershed Management 또는 Catchment Management)는 이러한 유역이 물관리에 있어 기본적인 관리단위가 됨을 의미하는 데 우리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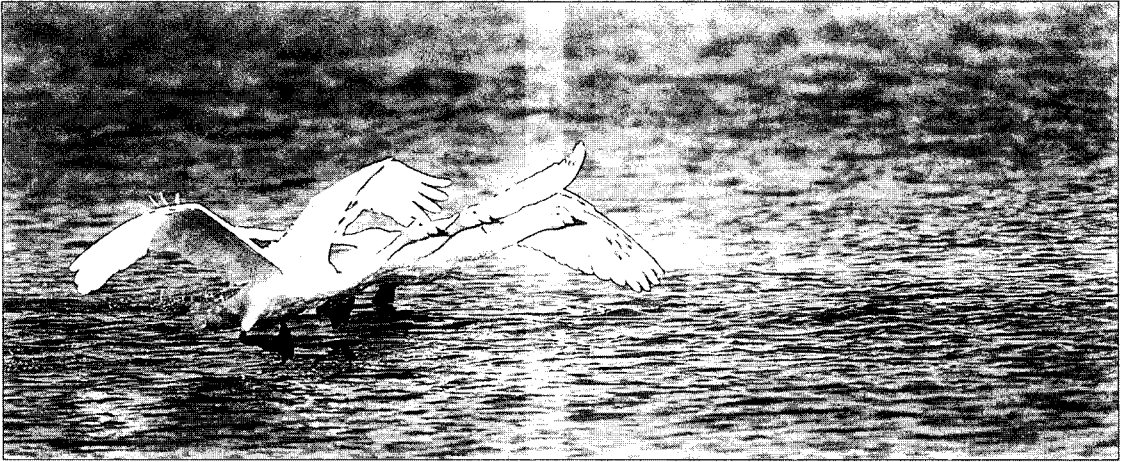
라는 물론 미국, 호주, 유럽, 일본 등 선진 외국에서도 행정적인 단위의 물관리 개념에 대비되는 유역단위의 물관리라는 유역내의 모든 환경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제가 최근 실제 적용가능한 관리체제로 확립되고 있다.

유역관리는 “유역내의 물, 토지, 식생, 기타 자연자원의 균형적인 이용과 보전을 통해 자원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반복적인 결정절차 및 활동방법”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데 이는 ‘공통적인 수자원 관리의 목표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프로그램의 조정 및 새로운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일종의 접근방법(미국 환경보호청)’ 및 ‘유역생태계 회복 및 보전이라는 궁극적인 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방법’(캐나다 환경보호청)으로서의 유역관리 개념을 포괄한다.

2. 유역관리의 특징

유역관리 개념에 있어 주목할 기본적인 사항은 관리의 기본단위가 정치적 또는 행정적 경계가 아닌 유역경계라는 점이며 이같이 관리의 기본단위가 유역단위로 전환된다는 것은 관리방식의 단순한 전환이 아닌 관리개념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 하천은 유역생태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요소로서 유역의 주민, 토지, 대기, 식생 등 생태적 구성요소와 생태적 연결고리를 통해 직접·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하천수질의 악화는 생태학적인 측면에서는 유역생태계의 한 구성요소인 주민활동이 자연적인 유역생태계가 가지는 자정작용의 한계를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이로 인해 기타 다른 생태적 구성요소를 파괴한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관리의 단위가 유역이라는



점은 개념적으로 물문제로 오염물질의 배출, 식생의 파괴, 토양의 유실 등과 같은 단위문제보다는 유역 전체의 생태적 구성요소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통합적인 구조에서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생태적 개념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가. 생태적 개념에 기초한 유역관리
“통합유역관리”

생태적 접근방식은 유역에 거주하는 인간을 자연계로부터 분리된 독립개체가 아닌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로 간주하며 환경문제를 특정 문제별, 사안별로 단편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유역내에 원활한 물공급, 수질개선, 생태계보전 등의 다양한 문제와 연관하여 그들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방식으로 다루게 된다. 여기서의 상호작용은 자연적 요소 뿐만 아니라 주민활동이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주민활동과 관련된 사회, 문화적 요소, 법적관리체제 등의 문제까지를 포괄한다. 따라서 생태적 개념에 기초한 유역관리는 내용측면에서는 통합적인 성격을, 범위측면에서는 종합적인 성격을 띄게 된다.

생태적 개념에 기반을 둔 유역관리는 자연자원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문제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면 재발할 수 있는 지역적·즉각적인 대책보다는 유역생태계의 회복을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유역관리계획은 기존의 관리계획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한가지 환경문제를 다루는 단편적인 접근방식이 아니라 유역내의 원활한 물공급, 수질개선, 생태계보전 등의 문제 등을 그들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다룬다.
- 용수공급이나 홍수통제 뿐만 아니라 생물서식지, 오염예방, 수질 등의 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수량과 수질문제를 동시에 다룬다.
- 인간을 포함하여 생태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기본적으로 각 분야의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요구된다.
- 현재와 미래의 문제, 해결책, 결과를 모두 고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유역은 여러 정치적, 행정구역을 포함하므로 모든 수준에서의 정부간 또는 정부내 기관간의 대화, 협력, 이해, 협조가 요구된다.
- 효과적인 유역의 크기는 관리목적에 따라 다르나 용수공급 및 배분은 대유역, 비점오염원은 중유역, 수질오염은 소유역이 바람직하다.
- 유역관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의 거대한 계획을 통해 일시에 해결하기보다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강조한다.

- 지역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에 대한 계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한다.
- 지역주민을 포함한 유역의 이해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목표 또는 비전을 개발·공유하여야 한다.

나. 참여와 협력

특히, 주목할 사항은 유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있어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제한된 재원으로 유역의 다양한 환경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유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점진적인 관리가 수행되어야 하는데 이해당사자간에 첨예하게 대치되는 사안에 대해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계획의 시행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역관리계획은 중앙부처 수준의 기존 사안별 계획과는 달리 유역단위의 문제 파악, 우선순위 도출,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역수준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을 비롯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다. 유역통합관리계획의 수립·조정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더불어 강조되어야 할 유역관리의 특징 중 하나는 유역단위의 통합된 관리계획을 도출할 수 있는 조정기능이다. 유역내 환경문제에 대한 관리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도출 뿐만 아니라 기존 매체별 또는 사안별로 환경문제를 관리했던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사 등간의 업무영역, 우선순위, 자원배분에 관한 이견조정이 선결과제이다. 특히, 각 기관별 소관사항을 단순히 정리 및 종합하는 관리계획이 아니라 유역고유의 생태계 보전이라는 목표하에 점진적, 세부적, 일관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내용상 통합된 관리계획이 수립 및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해내는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유역관리는 계획의 수립에서 완료까지의 일회적인 관리가 아니라 일관된 목표를 향해 가능한 수준까지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우선순위 설정, 시행, 변화된 여건 및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계획의 수정·보완, 시행 등 일련의 반복된 순환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II. 유역관리의 필요성

1. 우리나라 수자원 관리의 문제점

그간 우리나라가 수자원 관리에서 직면해왔던 문제점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수자원 관리를 위한 유역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는 실질적인 수자원 관리상의 문제를 전체 수계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수자원 관리에 있어 유역생태계를 통해 연결된 자연자원과 수자원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유역경계와 행정구역경계의 불일치는 물 이용과 관련된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물은 정제되어 있지 않고 강우, 지표수, 지하수, 하천수, 수증기, 해수 등의 형태로 자연적인 순환과정에 따라 이동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수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경계의 구분은 다소 인위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관리의 편의 및 수권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기존 수자원 이용계획의 수립 및 관리는 유역보다는 행정구역 단위로 수행되어 왔다. 따라서 물 이용과 관련되어 유역의 상·하류간 분쟁의 구조적인 원인을 제공해 왔다. 이런 면에서 수자원은 각 행정구역이 속한 재원이 아닌 유역의 주민을 포함한 생태계구성원 전체의 공공재원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유역단위의 수자원 이용계획이 수립 및 관리되어야 한다.

2. 유역통합관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수자원은 크게 수량, 수질, 지하수, 지표수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다. 다른 외국의 예와 마찬가지로 수량관리는 생공용수 및 농업용수의 확보라는 측면과 홍수통제 등을 통한 자연재해의 방지라는 측면에서 수질관리와는 별도로 예전부터 수행되어 왔다. 이후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오염부하의 증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질관리가 시작되었고 급속한 인구의 증가와 산업발전에 따른 오염부하량의 관리를 위해 배출수의 처리를 포함한 수질관리가 강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량 및 수질은 수문학적으로 연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처에 의해 관리되었고 수자원의 이용 또한 전체적인 수계시스템에 대한 영향 및 필요성에 근거하기보다는 부분적인 목적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 이같은 분화된 관리체계에 있어 물관리 담당부처나 이해당사자간의 원활한 이견 조정, 참여, 협조가 제고될 수 있는 관리체계의 도입이 요구되며 이러한 점에서 유역관리시스템의 도입이 고려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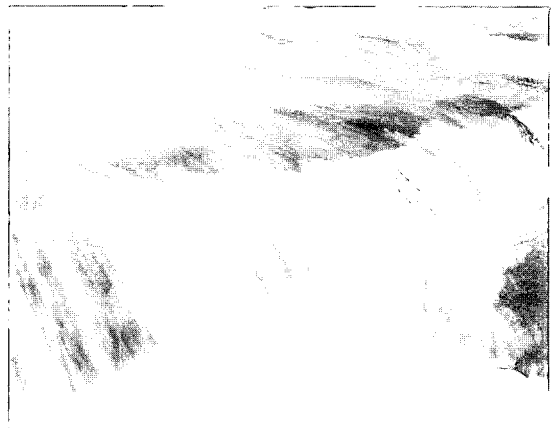
수자원 관리에 있어 더욱 어려운 문제는 수자원이 유역생태계를 조성하는 자연자원의 일부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수자원의 관리를 위해서는 기타 자연자원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유역생태계 구성요소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하천의 수질 및 수량은 유역의 토지이용, 식생 등에 좌우되고 유역의 토지이용, 식생 또한 수질·수량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유역생태계 구성요소간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수자원 관리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종종 유역생태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하천수질의 문제에 있어 점오염원은 배출원에 대한 관리의 강화 등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으나 배출경로가 불확실한 비점오염원의 경우는 지역 개발행위, 토지이용, 식생 등을 포함한 유역의 구성요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하여 다루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자원 이용계획 및 시행이 적어도 유역단위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수량, 수질, 지하수, 지표수로 분화되어 있는 관리가 통합되어야 하며 사안별

또는 수자원 문제에만 국한되어 지엽화된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자연자원에 대한 관리 일부로서의 수자원 관리가 요구되는 것이다.

3. 유역통합관리의 기대효과

유역단위의 통합적 관리는 환경문제의 해결 뿐만 아니라, 재정적·사회적·관리적인 측면에서 유용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상수원 보호, 오염원 관리, 어류 및 야생동물의 서식처 보호, 기타 자연자원 보전정책을 담당 부서별로 계획·집행·수행해 왔다. 이같은 체제에서는 문제의 파악이 국부적일 수밖에 없으며 목적에 적합한 대상만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악영향이나 관리에 따르는 개선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 이러한 부서별 대책의 결과를 관련된 부처 또는 부서가 공동으로 평가하고 검토한다면 다양한 수준의 관리자가 각 분야의 문제로부터 야기되는 총체적인 악영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고 각 유역마다의 주요 문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문제부터 한정된 재정과 자원을 우선적으로 할당함으로써 실질적인 환경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적 유용성과 더불어 유역관리는 기본적으로 이해당사자간의 원활한 의사교환과 조율을 통해 중복되는 노력과 상충되는 문제를 사전에 조절함으로써



써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용절감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유역관리는 제한된 자원을 이용하여 가장 큰 환경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시·군·구 등 모든 수준에서의 공공 및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즉, 수자원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수자원의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한다면 물관리 관련 활동에의 참여를 통해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공감대 형성, 상충요인의 저감, 실질적으로 다양한 환경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의 유도 등이 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물관리 뿐만 아니라 더 큰 범주의 효율적인 환경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III. 한강유역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추진현황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23개 시·군에 공급되고 있으며 일일취수량이 약 1,500만톤으로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단일 대규모 상수원이다. 그러나 팔당상수원 유역은 서울과 인접한 지역적 요인과 수려한 주변경관으로 인해 주거 및 위락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었고 특히, '94년 이후 국토이용관리법의 전면개정으로 준농림지역의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위주의 행정정책과 맞물려 상수원주변지역의 개발이 가속화됨으로써 정부의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정('90),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질은 '98년 BOD 15ppm까지 악화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5년까지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로 유역관리 개념을 도입한 물관리 정책인 『팔당호등한강수계상수원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을 11개 중앙행정기관 및 5개 광역자치단체 합동으로 수립('98.11.20)하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제정('99.2)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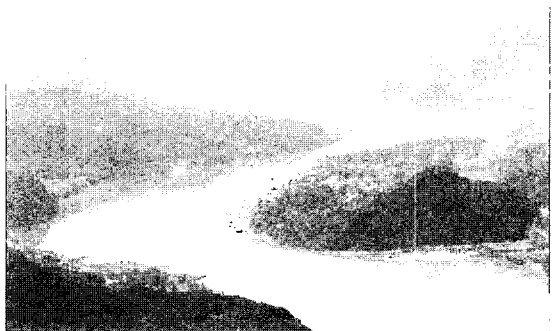
으로써 한강수질개선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동 대책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예방관리대책',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배출기준 강화 등 오염물질 삭감대책', '농·축산업 등 유관부문의 친수정책기능 강화', '상수원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대책', '물관리기구 정비 등 수질관리행정체제 혁신' 등을 골자로 상수원지역에 오염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수변구역·보안림 지정, 오염총량관리제 실시 등 오염예방대책을 새롭게 도입하여 '05년까지 2조 6,385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완비하는 한편,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여 상수원지역 주민과 상류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상·하류 공영(Win-Win)의 정신을 구현하도록 하였다.

한강특별대책 수립 및 한강특별법 제정에 따라 한강유역 전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지닌 한강유역환경청이 개청되어 한강유역 물관리에 관한 각종 현안과 정책을 슬기롭게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역할과 함께 한강유역 전반에 대한 수질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기구의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그간 추진된 주요 정책 및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선진형 수계관리 정책의 도입

가. 상류지역 지원방안 강구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생활기반 확충, 소득증대사업 등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2002년까지 191,014백만원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상수원 수질보전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고 있으며, 민간환경단체 육성 지원(2002년까지 22억원 지원)을 통해 시민의 환경의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감시활동 등 유역관리를 위한 역할에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나. 유역의 생태적 건전성 증진방안 추진

팔당호, 남한강, 북한강 및 경안천의 양안 특별지역내 1km, 대책지역 밖 500m(191.3km)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음식·숙박시설, 목욕탕, 축사, 공장 등 오염유발시설의 입지를 금지함으로써 난개발 예방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상류지역내 토지매입의 지속적 추진으로 오염원 감축 유도 및 오염원 입지를 사전 차단하고 매수토지에 대한 생태복원사업으로 자연정화기능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질소, 인 저감시설 설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친환경농업의 적극 육성과 농경지 배수관리, 호소내 인공 수초섬 설치, 하천부지 경작제도 개선 등 상류지역 하천 녹조현상(부영양화)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다. 유역내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하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확대 등 배출시설에 대한 입지제한 및 기준 강화를 통해 유역내 배출시설에 의한 환경적 위해성을 저감하는데 힘쓰고 있다.

2. 유역통합관리체제 정착을 위한 기반 구축

비점오염원 유역모델 및 하천수질모델을 연계한 소유역별 과학적 수질예측시스템(한강유역통합관리시스

템) 구축 등 환경기초조사·연구사업 추진 및 유역수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였으며, 오염원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오염총량관리제도 사례 연구, 오염총량제 조기 정착·시행을 위한 포럼 개최 등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기초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3. 친환경적 지역경제사업 지원 확대

환경농산물 장터 개설 등으로 상수원관리지역의 친환경농업 지원을 확대하고 하류지역 주민들의 친환경농업 필요성 인식 유도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친환경적 청정산업 지원으로 상수원 수질보전과 상류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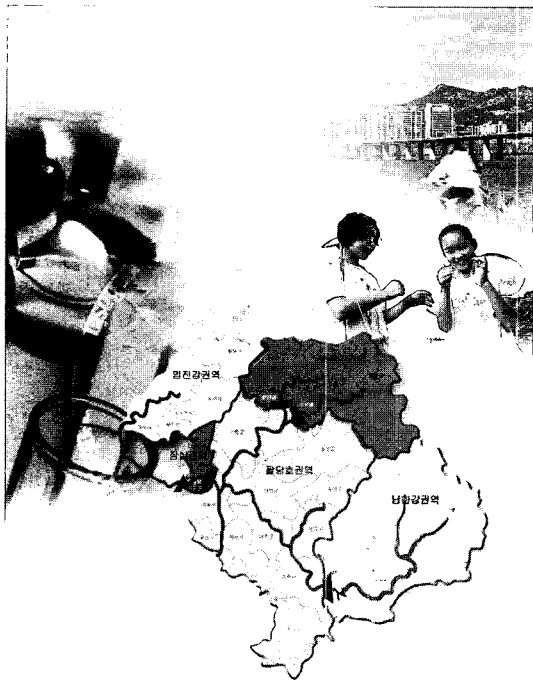
4. 팔당특별종합대책 추진성과 점검·보완

대책 수립연도인 '98년 이후 2002년까지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에 사업비 16,400억원을 투자(당초 계획대비 96%)함으로써 수질오염부하량을 저감하고, 경안천, 왕숙천 등 중점관리구역에 대하여 수생태계 회복 및 생태계를 고려한 보 개량사업 추진, 수초재배섬 설치 운영, 자연형 하천정화시설 설치, 갈수기 지천관리 대책 수립·시행 등 각 분야별 오염예방 및 오염물질 삭감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98년 이후 현재까지 추진된 한강특별대책에 대한 투자실적 및 수질변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2005년 목표수질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분야별 향후 발전방향 제시를 추진하고 있다.

5.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교육·홍보

가. 선진 환경정보서비스시스템 구축

종합 환경교육프로그램인「Eco-Academy」를 개설·운영하여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지역사회 환경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론교육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정보시스템「Eco-Club」을 구축하여 계층간 환경정보 공유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유도로 환경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나. 상·하류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홍보활동 추진 「한강 물포럼」, 「한강수계관리 연찬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물관리 정책 및 추진상황에 대한 한강수계 기관간, 계층간 협조와 이해를 증대시키고 지역주민을 포함한 유역의 이해 당사자간 정보 교환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림그리기 대회, 수기 공모전, 사진 공모전, 각종 아이디어 제안 등의 프로그램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환경교육·홍보단」, 「한강순례」, 「주부환경체험프로그램」, 「친환경농업 현장 견학」 등 다양한 현장체험의 기회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여 친환경문화의 확산 및 실생활에의 정착을 위한 활동을 개발, 추진하고 있다.

6.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의 효율적 운영·관리

다중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류지역 주민 및 지방자

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팔당상수원의 성공적인 수질 관리를 위해 징수되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에 대한 합리적 조정,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수립 및 개선방안 마련으로 기금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하여 물이용부담금 채도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을 I급수로 개선하기 위하여 유역관리개념을 바탕으로 수립된 한강특별종합대책의 주요 추진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동 대책의 추진성과는 무엇보다 2002년부터 시행된 금강, 영산강, 낙동강등 3대강 특별법과 관련하여 새로운 유역관리업무의 추진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아울러 지역주민의 이해가 직결되거나 규제지역과 수혜지역이 다른 경우가 많아 합리적인 대책 마련과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어렵고, 지역간 경제개발을 둘러싼 이해의 상충 등으로 인해 대책이 수립된 '98년 이후 현재까지 담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지연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우선시된다

유역구성원들이 함께 협력하여 건강한 유역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는 유역관리시스템은 많은 선진 외국사례 등을 통해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유용한 방식임이 입증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에도 한강특별종합대책의 성공의 관건은 유역관리시스템의 적극적인 추진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강유역의 수질관리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기업체,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 유역구성원 전체의 이해와 참여 그리고 협조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